

잡나는 추석 물가... 제수용품 가격 1년새 급등

삼겹살 53%·밀가루 91% '깡충'

과일·채소류 등도 올라... 서민 부담 가중

추석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급등세가 지속 되고 있는데 올 추석은 예년보다 한달 가량 빨라 과일 등의 수급 차질까지 빚어져 주요 제수용품 값이 큰 폭으로 올라 가족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22일 농협유통이 분석한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동향'과 농협 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추석을 25일 앞둔 지난 20일 현재 농협 하나로클럽 매장서 고기전 등의 재료인 다진 돼지고기(100g)는 89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25일전(8월 31일)의 590원보다 50.8% 높은 수준이다. 같은 양의 앞다리살과 삼겹살 역시 각각 49.7%(628원→940원), 53.3%(1천200원→1천840원) 뛰었다. 닭고기(850g)도 4천500원에서 4천850원으로 7.8% 올랐다.

명절 음식에 필수적인 밀가루(1kg)의 경우 국제 곡물가 폭등의 영향으로 1년사이 890원에서 1천700원으로 91%나 급등했다.

예년보다 추석이 이른 탓에 과일 가격도 들쭉이 있다. 사과(홍로 13개이하들이 5kg) 값은 현재 4만1천원으로 작년의 3만7천원보다 10.8% 높고, 배(신고 10개이하들이 7.5kg) 역시 3만2천원으로 1년전 가격(2만9천500원)을 8.5%(2천500원) 웃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등 과일도 조생종의 품귀현상으로 덜 익은 과일 출하가 이뤄지고 있어 가격 상승은 물론 전남산 과일의 이미지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나마 계란과 수산물 가격은 안정세다. 조기(중자) 한 마리는 4천500원으로 1년전

4천600원보다 2.2% 낮고, 황태포도 4.9%(4천660원→4천430원) 떨어졌다.

이런 농축산물 물가 불안은 추석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 농협은 사과의 경우 저온 및 서리 피해로 생산이 줄었고, 배도 이른 추석으로 처래상에 올릴 만한 큰 과일이 적은 만큼 올해 추석 가격대가 작년보다 5~10% 정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닭과 계란 가격도 작년에 비해 각각 23.5%, 18.2%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농협 관계자는 "하나로마트의 가격 상승률이 이 정도라면 다른 일반 유통업체나 재래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더 높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주부 김경숙(42·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고물가로 생활이 팍팍한 상황에서 이른 추석에 따른 생수품 가격마저 뽐발질해 올 추석나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ee@kwangju.co.kr



광주·전남권 대학총장 초청 간담회

전남도 주최 '광주·전남권 대학총장 초청 간담회'가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가운데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는 대학 총장들의 협조를 얻어 지역 대학의 연구 성과와 인적 네트워크를 투자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청 제공>

21개 물가 특별관리 농축산물 공급 확대 중소자금 7천억 지원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쇠고기·삼겹살·명태·고등어·목육류·미용료 등 21개 주요 농축수산물 및 개인서비스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 가격 동향을 집중 감시한다.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정부 및 농·수협 보유 물량을 풀어 최대 3배까지 공급을 늘린다. 아울러 7천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돈을 풀고 터주고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교육비·보험료·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한다.

정부는 22일 과천 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를 물가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쌀·무·대추·사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달걀·명태·조기·고등어·오징어 등 16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미용료·목육류·삼겹살·돼지갈비 등 5개 개인서비스 등 총 21개 품목의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예년과 비교해 정부의 추석 물가 대책이 1주일 정도 앞서 시작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소비위축 환란 이후 '최악'

실질소득 증가율 0.3% 그쳐... 소득 격차도 심화

전국가구가 처분가능한 소득에서 실제로 쓴 소비지출액의 비율이 관련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 격차 역시 2분기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 소득분배 악화 현상이 지속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2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증가했다.

물가급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0.3% 증가에 그쳐 지난해 2분기 증가율 1.0%에 비해 낮았고 올해 1분

기의 실질소득 증가율 1.2%와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소득을 5분위로 나눠서 살펴보면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664만8천원이며 1분위(하위 20%)는 89만1천원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7.46배에 달해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컸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2분기 5.04배에서 올해 2분기 5.11배로 더 악화됐다.

전국가구의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은 6.1%, 사업소득은 1.7%, 이전소득은 8.7%가 각각 증가했으나 재산소득은 0.4%가 감소, 최근의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을 반영했

다. 전국가구의 2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219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 늘어나는데 그쳤고 실질로는 0.2%가 감소했다.

소비지출 규모를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283만6천원에서 빼면 남은 흑자액이 63만8천원으로 흑자율은 22.5%였다.

소비지출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77.5%로 작년 동기에 비해 0.5% 포인트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관련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전분기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의 경기불황과 자산다름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실제 소득문화에 비해 훨씬 더 위축돼 있음을 나타낸다.

/연합뉴스

시 설

청신호 켜진 F1, 특별법 제정 서둘러라

정기권이 전남 F1(포틀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인천 아시안게임을 지원할 국제경기지원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면서 국가적 이벤트이기도 한 이들 국제경기를 국회

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행사의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전남도가 2010년 개최할 예정인 F1 대회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인 'F1대회 지원법안'은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 무소속 등 의원 7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전남

도와 관련한 F1대회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된다. 국회 지원특위라는 든든한 후원자까지 확보한 셈이다.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별법이 제

정되면 F1대회 개최권료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비 등 1천200여억 원

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F1대회 성공 개최의 핵심인 것이다. 국회는 여야가 공동발의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입

회 정책위의장 등이 나서 반대위원을 설득하고 있는 것은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고 있다. 여야가 지난 17대 국회처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일은 촉박하다. F1대회 개최는 2년 여부에 남지 않았다. 경주장과 모터스포츠 R&D센터, 친환경 자동차부품 생산단지 등 부대시설을 차질없이 건립하고 대회 조직위를 구성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OC 확충도 서둘러야 한다. F1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새 정부 6개월 국민과 함께 거듭 나야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의 6개월은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을 내세웠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등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국론은 사분오열돼 있다. 시행착오

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고소영' '강부자' 등의 유행어를 낳은 인사파동으로 시작된 국정 난맥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른 촛불 시위로 최고조에 달했다. 여기에 독도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이 터지며 국정운영에 문제를 드러냈다. 출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실망만 안겨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의 와중에서 국민에게 두 차례나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했다. 지지율도 10%대 중·후반까지 추락하는 등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

부하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과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까지 회복됐다고 하지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국정현안은 산적해 있다. 물가와 고용, 환율, 소득 양극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침체에 빠진 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없다. 사회의 이념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국론은 분열돼 있다. '코

트 인사' '보은 인사' '편중 인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사행태도 되풀이되고 있다. 총체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 6개월의 국정 난맥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통찰의 정치를 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약속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檢, '주가조작' 최규선씨 등 6~7명 내주 소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다음 주 중 해외 에너지 개발업체인 유아이 에너지의 대표 최규선(48)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유아이에너지와 관련 자회사인 수주수출에 이어 최씨 등 회사 관계자 6~7명을 출국금지 조치 했다. 검찰은 최씨가 이라크지역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돈을 빼돌려 수십억원대 비자금

을 조성했거나 사업성을 부풀리거나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 최씨가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유아이에너지 본사 및 유아이에너지(해외 건설업체) 등 계열사에

서 압수해 온 회계장부 등을 검토하고 관련자 계좌주적 및 회계 담당자 조사 등을 통해 회사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씨는 유아이에너지 부회장으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내 지역에 병원공사를 수주하는 등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해 이라크 지역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2006년 11월 유아이에너지가 서원아이엔비를 인수, 회사 이름을 유아이에너지로 바꾼 뒤 자원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코스닥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했던 서원아이엔비의 주가는 2005년 12월 말 930원이었다가 최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 연속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006년 12월에는 5천 원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靑 2기 수석 비서진 재산 평균 18억... 1기의 절반 수준

지난 6월 임명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대통령실의 신임 참모진 7명이 보유한 재산 가액이 평균 1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2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등 수시 재산등록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 대통령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 신임 참모진 7명이 신고한 본

인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전체 재산

평균액은 1인당 18억3천8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대통령실 신임 참모진과 정부부처·공직유관단체 고위 공직자, 지방의회 의원 등 신규 등록 대상자 20명, 청와대 전임 참모진을 비롯한 퇴직자 28명, 재등록자 4명 등 모두 52명이다.

청와대 신임 참모진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박병원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모두 35억5천649만원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완전히 폭 빠져 정신없다

“영산강 수질 개선·J프로젝트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남 은 이만의 환경장관

한 지원을 건의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2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질 등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7회 한국 강(江)의 날 주주대회 참석차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 장관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업무보고를 받고 영산강 현황을 둘러보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의 수질과 녹지, 생태지역 보전을 강조하고 “영산강 수질 개선과 J프로젝트 부지 인근 금호·영산·영암호의 수질 개선에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도 J프로젝트 사업구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앞두고 있는 전역 지구의 승인신청이 신속한 처리와 환경기반시설 등 영산강 수질개선사업에 대

시·도의회 의장協 회장 이상천씨 부의장에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이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을 선출했다.

신임 이 회장은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부회장은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김남욱 대전시의회 의장, 고진섭 인천시의회 의장,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등 4명이, 감사에 최재규 강원도의회 의장과 이태일 경남도의회 의장이, 사무총장에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29 정 처 부 2200-616 사 회 1 부 2200-618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제작부 2200-628 체 육 팀 2200-627 사 진 부 2200-690 조 사 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F A X> 22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F A 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